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축산업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 농축산업 현안 해법 논의

### 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외국인 노동자 숙소·공정위 수급조절 문제 등 제기
### 이원택 위원장 "현안 해결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는 농축산업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나진호 부위원장, 이호중 정책센터 소장이 참석했고,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축산업 주요 현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농식품 수급조절 문제 ▲후계농 상속세 개선 문제 ▲공익형직불금 개선 문제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상호 한국버섯생산자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를 집중제기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해결에 대한 견해 차이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하며 "현행 농지법 상 농막에서는 휴식은 가능하나 주거지역이 아니라 취침은 불가해 농식품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택 위원장은 "농지법 복합용지(막사, 관리사)를 농지로 통제하도록 농식품부 차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식품부가 기숙사 관련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공정위 수급조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수급조절 요청으로 인해 가격 안정화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가격 조정을 카르텔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없다면 피해를 보는건 농민들이니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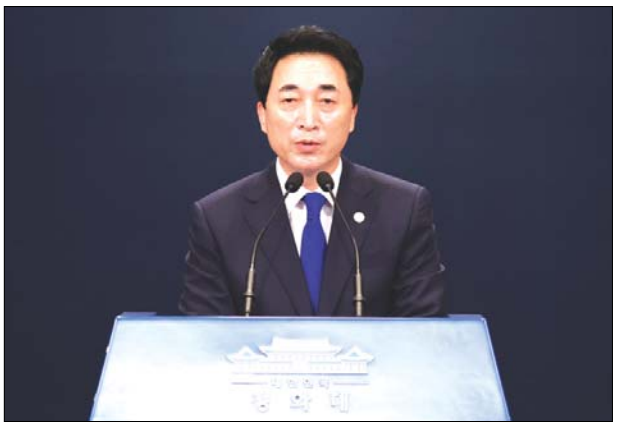
이에, 이 위원장은 "아직 두 부처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당과 청와대에 관련 안건을 올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후계농 상속세 완화 문제, 공익형직불금 개선문제,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농식품 온라인 불공정거래 문제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점차 늘리겠다"며 "우리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靑 참모진 대폭 정비

### 문 대통령, 임기 말 국정동력 유지 총력
### 수석·비서관급 8명 교체 조직 안정·국정회복 모색
### 박수현, 3년만에 승진 복귀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돼



박수현 신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총 8명에 달하는 수석·비서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정동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기말 불가피한 레임덕(권력누수)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을 청와대 중심으로 이끌고자 참모진 대폭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승진 발탁한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수석·비서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소통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 3명의 차관급 교체 인사에 이어 5명의 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시민사회수석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새 대통령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주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를 내정했다. 또 자치발전비서관(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윤난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서영훈), 문화비서관(이경윤), 여성가족비서관(정춘생) 등 5명의 비서관을 각각 새로 임명했다.

이번 비서관 인사에서 기존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이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외부에서 새로 발탁한 인물들이다. 정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임기말 내부기강을 다잡기 위한 인사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경윤 신임 문화비서관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임명 2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한 전효관 전 비서관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다만 지난 4월16일 박경미 대변인 임명으로 공석으로 남겨진 교육비서관 자리는 이번 인사에서 채워지지 않았다. 후속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수석 교체가 이번 대규모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3년 4개월 만에 비서관급에서 수석으로 승진 복귀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됐던 정만호 소통수석은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수행을 끝으로 9개월 여 끝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가 예상된다.

'청와대의 얼굴'이자 대국민 소통창구인 소통수석을 교체한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한 뒤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전개되면 세간의 관심이 자연스레 여의도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다. 청와대 주도의 국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박 전 대변인을 '마지막 소통수석'으로 재발탁했다는 관측이다.

박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가 낙선한 뒤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남다른 친화력과 탁월한 소통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아왔다.

박 수석은 이날 "민심 수석이라는 각오로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의 심장에 있으므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청와대가,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허리를 숙여서 국민의 심장에 귀를 정중하게 맞추는 일이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박 수석은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검증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민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뉴시스

# 행정대집행 따른 징수 비용 범위·산정기준 마련

### 불합리한 산정 비용 인한 소송 등 빈발 따라
### 민주 신영대 의원, 일부 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징수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제3자가 이를 대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 제도로, 강제퇴거나 강제철거(원상복구) 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대집행 이후 의무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탓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단가 등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산정 비용으로 인한 소송 등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래전부터 행정대집행의 비용산정 기준 및 계고 절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해왔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객관적인 행정대집행 비용산정 기준이 마련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징수비용과 관련한 소송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행정은 예측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과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대집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 도, 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가축질병 신고센터' 운영

전북도는 여름철 대비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시·군의 예찰요원과 공수의를 동원해 고령농가나 시설이 열악한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 예찰 요원 및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하절기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혹서기 일반 방역관리 요령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 지속 시 방목 금지 및 운동장에 차양막 설치, 축사 내 환풍기 설치 및 주기적인 강제환기 실시로 축사 내 적정온도 유지 등을 당부했다.

여름철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모기매개성 가축전염병(돼지 일본뇌염,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은 유산이나 사산, 기형 송아지를 생산하는 등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 확보 및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사료 급여통과 급수조는 가급적 자주 청소를 실시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사료 변질 여부도 자주 파악하는 등 방역 대책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사양 관리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연락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요령을 참고해 혹서기 사양 관리를 통해 가축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종별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요령은 전북도 홈페이지-부서별 안내-농축산식품국-동물방역과-부서소식에 게시돼 있다. /유호상기자

## 도내 기초의회 소식

### 과거의 정신문화 아닌 미래사회 필수 지혜로
### 박병술·김은영 전주시의원 효(孝) 문화 진흥 정책토론회

전주시의회 박병술(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과 김은영(효자1·2·3동) 의원이 지난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효(孝) 문화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인 효 문화 확산과 실행 방안 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제자인 김덕균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연구사업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효 정신이 과거의 정신문화가 아닌 21세기 미래사회에 필요한 삶의 지혜로 계승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술 의원은 "예로부터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서 사회윤리의 근본이 돼 왔다"며 "노인 공경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첫 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효 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의원은 "개인주의의 횡행 등으로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퇴색돼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다시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국민통합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을"

### 국힘 통합위, 전주~김천 철도 등 5개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사진)는 지난 28일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호남동행 활동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영·호남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영·호남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센터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도,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야간돌봄서비스 강화

전북도가 취약계층의 어르신 대상 돌봄서비스를 야간시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치매와 노인성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어르신 돌봄에 대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보조금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옥 도 노인복지과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전문가의 보살핌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 농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 추진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 건강을 증진하고, 농촌의 힐링(치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건강힐링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은 다양한 마을사업 중에 마을과 경영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첫 시도이며, 마을과 경영체가 서로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체험 휴양마을의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 개별경영체(농장)의 치유프로그램, 모객활동 등 서로의 강점을 상호 보완해 추진한다.

올해는 3개소를 선정해 마을 자원조사 등 사업기획을 통해 건강힐링 마을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기획된 사업을 평가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치유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등 기반구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힐링(치유)공간 조성, 힐링(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먹고(치유식단), 보고(치유자원), 즐기는(치유체험)'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